

##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3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국민권익위,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당사국 총회 참석('23.11.10.)
- ② 국민권익위, 부산 산업단지 방문해 기업인 현장 목소리 청취('23.11.10.)
- ③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관련 경제단체 현장 목소리 청취 ('23.11.30.)
- ④ 국민권익위, 일선 행정청과 '정부지원금 누수방지 방지' 머리 맞대('23.11.24.)
- ⑤ 국민권익위-유엔개발계획, 전 세계 반부패 연대 강화 지속('23.11.29.)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9)

## 국민권익위,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당사국 총회 참석

정승윤 부위원장, 공정 채용기준 마련 등 반부패 주요 성과 발표

(‘23. 11. 10.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9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반부패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 Corruption Academy, 이하 IACA)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의 주요 반부패 성과를 공유했다.

80개 당사국이 참여하는 제12차 IACA 당사국 총회에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IACA는 2010년 오스트리아에서 개관한 국제 반부패 교육·연구 전담 국제기구로, 2012년부터 매년 당사국 총회를 개최해 각국의 주요 반부패 동향을 공유하고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왔다.

이번 총회에서는 새로운 의장단(의장 1명, 부의장 2명) 선출, IACA 2021년~2024년 업무 프로그램 이행 보고, 부패 방지와 척결의 최신 동향 및 도전 과제 등에 대한 의제를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립 ▲기업용 청렴 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안내서 발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시 국민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활용 도입 등 지난 1년간 우리나라의 부패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공유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패방지 및 척결을 위한 최신동향에 대해서도 당사국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와 당사국들이 반부패 법·제도 개선 등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반부패 교육과 연구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IACA가 국제사회의 반부패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교육·연구기관으로 더욱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부산 산업단지 방문해 기업인 현장 목소리 청취

10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기업고충 현장회의 개최

(’23. 11. 10. 국민권익위)



산업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산업단지 입주(협력) 기업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10일 오후 부산광역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산업단지 입주(협력) 중소기업 및 관계기관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날 현장을 찾아 ▲산업단지 내 노후도로 보수 ▲대중교통 여건 개선 ▲산단 내 공용주차장 등 확대 ▲상습 교통정체 해소 방안 등 기업인들의 다양한 고충 및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김 부위원장은 현장회의에 앞서 녹산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주식회사 태웅 기업을 방문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기업인들의 고충을 최대한 현장에서 처리하되, 즉시 처리가 어렵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법령·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산업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에 찾아가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관련 경제단체 현장 목소리 청취

30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경제분야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23. 11. 30.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30일 대표적 경제단체 중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가졌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음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 상한선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그간의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음식물 가액 현실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호소가 계속돼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식업계·소상공인 등 관련 단체, 경제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각계 각층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대한민국을 보다 깨끗한 청렴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온 것도  
사실” 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라고  
덧붙였다.

## 국민권익위, 일선 행정청과 ‘정부지원금 누수·낭비 방지’ 머리 맞대

-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정수급 대응 강화 방안 논의
- 지방자치단체 감사·보조금사업 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

(‘23. 11. 24. 국민권익위)

국민 혈세인 보조금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행정기관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오후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에서 충청·호남권역 86\*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감사담당관 및 사업부서 담당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했다.

\*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

국민권익위는 이번 워크숍에서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및 부정수급 취약분야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방안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김홍일 위원장은 워크숍에 참석해 ‘공직자의 청렴 마인드와 실천’을 주제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강원권(6월), 영남권(7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20년 1월 제정·시행됐다.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환수는 물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각급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에 대한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각급기관의 환수 노력을 견인했다.

또 취약·빈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 각급기관의 환수·제재부가금

457억 원('20년) → 1,056억 원('21년) → 1,336억 원('22년)

\*\* 국민권익위의 집중점검 실시 후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권고

4억 원('20년) → 3억 원('21년) → 31억 원('22년) → 101억 원('23년)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각급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공공재정이 낭비되거나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정환수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유엔개발계획, 전 세계 반부패 연대 강화 지속

양해각서 재연장...개발도상국에 반부패 정책 확산 협력·지원

(‘23. 11. 29.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엔개발계획이 기존의 업무협약을 연장하고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확산하는 데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과 개발도상국 대상 반부패 정책 확산 관련 양해각서(MOU)를 연장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 안네 유프너(Anne Juepner) 소장이 참석하며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와 유엔개발계획은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2015년에 첫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년마다 연장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자리에서 지난 8년간 함께해 온 반부패 정책 공유사업을 되짚어보고 우리나라에서 성과가 입증된 우수한 반부패 정책 정보를 공유했다. 이어 유엔개발계획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이용한 향후 공유 및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양 기관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9개국\*에 부패방지 시책평가제도와 부패영향평가제도를 공유했다.

\* 베트남,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알제리, 몬테네그로, 코소보, 미얀마, 몽골

부패방지 시책평가(AIA)는 공공기관이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청렴활동과 그 성과를 측정하는 제도다. 부패영향평가(CRA)는 법령속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책을 마련한 후 법령 소관기관에 권고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제도다.

또 양 기관 공동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AIA), 부패영향평가(CRA)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협력 활동을 이어나갔다.

지난해부터는 코소보, 몽골, 우즈베키스탄에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을 공유하고 그간의 성과에 대한 자료집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유엔개발계획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공유하는 한편, 반부패 연대를 구축해 각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양 기관의 협업이 개발도상국의 부패 척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 안네 유프너 소장은 “국민권익위와 협력을 지속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더 많이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